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후폭풍… 국민의힘 '보이콧' 맞불

국힘 "李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것 남은 7곳 상임위 구성 협조 안하겠다"
민주, 국회법 개정 등 정상화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남은 7곳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도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서영교·조승래·유동수·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도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17차례까지 이어진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위원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에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에 상임위원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고, 남은 원 구성 협상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관례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서 시행하도록 하는 국회의장은 역대로 (원내) 1당이 차지했었고, 그 밑에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어느 당이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1둘 다 차지함으로써 완전히 (법안 통과의)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는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지켰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악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회 또한 공소취소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의 중심은 국익과 민생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여기(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주요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기준을 강화하거나 오히려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를 손봐, 빠른 민생 입법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법안조차 정쟁으로 인질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손 보겠다.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게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文 전 대통령 회동… '통합' 메시지 강조

민주당 내홍에 당 화합·지지층 결집
李 "구조적 다수 확보·외연 확장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내홍이 극심해지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한목소리로 '통합'을 이야기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수시로 문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가 높은 문 전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최근 극심한 내홍으로 피로를 느끼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민주당의 두 전·현직 대통령이 공식 회동한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구조적 다수'는 민주개혁진영을 사회의 주류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 외연확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보다 앞서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선 우리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임 민주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일부 극렬 지지층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 등이 지적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진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수시로 문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당 복귀한 김민석… 정청래 겨냥 견제구

"정 전 대표, 두 번 할 필요성 있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일 이임식을 마치고 당으로 복귀했다. 김 전 총리는 조만간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를) 굳이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이날부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을 마무리한 김 전 총리는 국회를 찾아 당내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엔 상임고문단과의 만찬도 예정됐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이번 전당대회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힌다. 최근 강연 등에서 당과 국회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내며 당권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주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염태영·이용우·윤종군·김태선 의원 등이 김 전 총리 측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이 총리 측에 대거 합류하는 모습에 당원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캠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도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정했다. 8월1일 충남·충북·대전,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서울·경기, 17일 대전 순으로 순회경선에 나선다.

다만 1일 충청권에서 순회경선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일정을 짠 것이 아니냐는 김 전 총리 측 일부 인사들의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준위·당 사무처 측은 "(장소) 대관이 가능한 곳부터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당으로 돌아온 김 전 총리는 이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면서 "(당 대표를)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정부는 일을 하는 곳이지만 당은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라며 "정부는 권력을 정책으로 행사하는 곳이지만 당은 권력의 원천이고 권력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단단한 기반과 뒷받침이 필요한데,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로 (당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비해 당의 역할의 폭과 숙제의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면서 "정 전 대표가 애썼고, 고생했고, 이룬 것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적인 과제와 숙제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맞게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경총 "노동법 고쳐야 투자 산다"… 국힘 개정 약속

경제 현안·노동시장 제도 개선 논의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현안과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낡은 노동법이 기업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약속했다.

경총은 이날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지속에 따른 물가 자극과 기업의 투자 위축,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여전히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 제도가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기업과 하청 노동조합(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계가 우려했던 산업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첫날부터 수백 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